

서울 시정연 '경부 운하' 타당성 연구 선거법 위반?

이명박 개입 여부가 초점

연구 용역 관계자 이명박 캠프 가담... '대선공약용'이었나 논란



현충원 참배하는 6·25 참전용사들 6·25전쟁 57주년인 25일 재향군인회 초청으로 방한한 해외참전용사들이 국내 참전용사,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함께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오시마 日대사 소록도 방문

수교후 처음...미보상 한센병 환자 보상에 관심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주한 일본 대사가 25일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일본 대사로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소록도를 방문한 오시마 대사는 이날 오후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노인전문병원과 소록도 일대를 둘러보고 원생자치회를 방문해 원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오시마 대사의 소록도 방문은 지난해 2월 일본 정부의 한센병 보상법이 개정돼 1945년 8월15일 이전 한센병 요양소인 '소록도 갱생원'에 입소했던 한센인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소록도병원을 찾은 오시마 대사는 병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개원한 지 90년이 넘는 소록도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겪은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병동을 찾은 오시마 대사는

환자들과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노인자치회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자료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한 30여 명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해달라"는 원생들의 요구에 오시마 대사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은 조건이 되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시마 대사는 소록도를 떠나기 앞서 "한센병은 심각한 병이지만 질병보다는 사회적 편견이 더 심한 질병"이라며 "인간사회의 편견과 오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시마 대사는 소록도 병원에 이어 목포 갱생원을 찾아 원생들을 격려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의 연구 용역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시정연의 경부운하 검토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입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용역 관계자 이 전 시장 캠프 가담=시정연연구원이 대운하 연구 용역을 발주한 지난해 초 원장으로 재직하던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 전 시장의 거시경제정책 공약인 '대한민국 7.4.7 전략'을 총괄 기획했고, 검토 연구를 수행한 세종대 배모·이모 교수는 이 전 시장의 한반도대운하 분야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시장 재임시절부터 대운하 검토 연구에 참여한 이들 3명이 대선 캠프에서도 계속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연구 발주가 이 전 시장의 대선 공약 개발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서울시의 국장급 공무원들이 시정연연구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일부 공무원들은 연구원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개입 여부가 초점=시정연의 경부운하 검토와 관련한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이 검토가 이 전 시장의 개입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다.

시정연이 2006년 2월 말~3월 초 서울경제연구원과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의 배모·이모 교수 등 3명에게 '수도권 물류 개선을 위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이 전 시장의 대선 공약 개발 차원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시장의 직·간접적 지시로 이 연구가 이뤄졌거나 이 과정에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시정연 직원이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은 우선 경부운하 연구가 서울시의 각종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시정연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국책 연구

기관도 아닌 시정연이 굳이 경부운하의 타당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시정연 측은 "2004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수도권 대(大)물류 체계 개편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했다"고 설명한다.

◇결혼정보업체 대표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편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언론사 기자에게 보고서를 넘겨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김씨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 P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10여분 전인 오전 8시50분경에는 성남시 분당구 김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4명의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락이 두절됐던 김씨는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BTL이 사람 잡는다는데



이종태 경제부 차장

지난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광주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난 호소에서부터 공제기금 무보증 대출확대 확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요구에 이르기까지 지역업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중 지역업체들이 유독 관심을 갖고 김 회장에 게 지원요청을 한 분야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서의 공사와 자재 분리발주였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한 임대료를 징수해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BTL은 정부의 예산부족을 보완하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역업체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BTL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달리 설계·시공과 기자재 납품을 따로 발주하지 않고 모든 걸 한데 묶어 입찰에 붙이고, 그나마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는 바람에 지역업체들은 죽을 맛이라는 얘기가.

금속기구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단 한차례도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들도 있는데다, BTL사업자에게 납품한 업체들도 예정가격의 50~70%인 덩핑 입찰로 되래 손해를 봤다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학교 BTL 사업의 경우 중국에서 반제품 객결상을 들여와 조립하지 않는 이상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면서 "자재납품 이후에도 BTL사업자로부터 3~6개월 어음으로 결제 받는 일이 많다"고 거들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독점방지와 함께 공사업자 재 분리발주 및 예정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BTL의 경우 민간자본의 투입되지만 정부가 사업자에게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업자도 정부가 공사의 품질이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가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핵심은 김 회장의 개선안이든, 국회의 개정안이든 현실적인 납품단가를 보장해 지역중기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jtleee@kwangju.co.kr

"균형발전 위해 호남-충청 대연합 추진"

이명박 "경선 이전 민주·국종당과 접촉"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 한나라당은 확실히 살려놓겠다"는 입장에서 볼 때 호남과 충청, 수도권 대연합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국민중심당 중심의 정치인, 정치세력과 접촉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선진화세력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5일 보도면 문화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와 이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다. 경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 (8월20일 대선 후보 확정) 그 이전이라도 시동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시장은 특히 '호남·충청·수도권 3대연합' 성격에 대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치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권은 이미 동남경제권으로 형성돼 있으니 호남·충청 등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은 따로 연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정치연합이 범여권에 대한 역포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결구도라고 볼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캠프의 박준준 공동대변인은 이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장광근 공동대변인은 "결국 지역·계층·세대·이념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강하게 밝히고 지역분할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범여권을 중심으로한 반 한나라당 전선에 맞대응하는 '이명박 중심의 인위적 정계개편 시도'라는 측면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새 정치'와 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이 이 같은 지역주의적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지를 하락 추세를 더 이상 방지할 경우 당내 경선 승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당 밖에서 찾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Seafood Festival (제주도 자리돔 축제)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like 'Jari-mulhoe' (자리물회) and 'Jari-mulhoe' (자리물회).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Island Seafood (제주도바다).

Advertisement for KARCHER vacuum cleaners, featuring a yellow robot vacuum cleaner and various stick vacuums. Includes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ARCHER.

Advertisement for 'Jirisan Han-yak-bang' (지리산한약방)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oducts like 'Diet' (다이어트), 'Joint Pain Relief' (전립선염), 'Joint Pain Relief' (조루), and 'Joint Pain Relief' (허리디스크).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map.